

2018 정부업무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

보고순서

1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2 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3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법무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1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

- | 적폐청산 수사 철저,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 강화
- | 방위사업비리, 국부유출 비리 엄단
- | 국고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로 재정누수 방지

■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 ('17년)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1,254 명 단속

346 명 구속

사회 공정성·투명성 저해 범죄 엄단

- |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교육비리 수사
- | 일감 몰아주기,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 엄단
- | 금융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단속

■ 주요범죄 단속 현황

32명
단속

15명
구속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17. 7. ~ 12.)

426명

84명

불공정행위 사범
('17. 1. ~ 12.)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실효적 단속

| 건축·소방·교통 분야 불법·비리 단속

- 소방시설 불법개조, 불량시공, 공무원의 묵인

| 환경·식품·보건 분야 부패 수사

- 인허가·보조금·납품 관련 업체·브로커와 공무원 유착



서민경제 침해 범죄 엄단

|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

- 중요 단속사례 적극 홍보, 유관기관과 다각적 대응

|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관련 불법, 보험사기 엄정 대응

- 보이스피싱사범 DB 활용,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운영

■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경영감독 실질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의결권 행사 활성화, 소수주주 대표의 이사 선임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 「상법」 개정안 내용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회사의 경영책임을 모회사를 통해 물을 수 있게 함

전자투표제 의무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가능

집중투표제 의무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주권으로 집중투표 가능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강화

|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 담합 등 소액·다수 피해발생 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어음 제도의 투명성·안정성 제고

-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일원화 입법 추진

■ 「집단소송법」 개정



2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8. 1.)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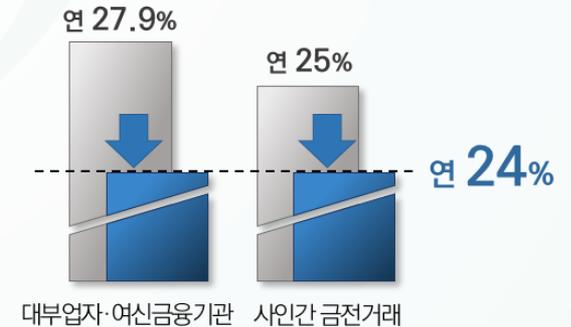
- 법정 최고금리 단계적 인하,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 강화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산법제 개선

- 범부처 통합 구조조정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노인·미성년자녀 등 복지 강화 입법

■ 법정 최고금리 인하 (‘18. 2.~)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국민참여형 소년 범죄 예방 정책 추진

| 民官이 함께 청소년을 선도하는 ‘명예 보호관찰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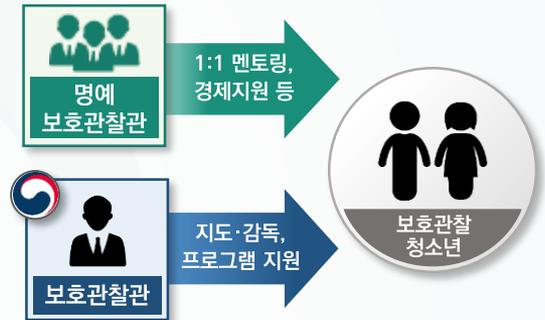
- '18. 1. 현재 퇴직교사 등 명예 보호관찰관 684명 활동

| 민영소년원 설립·운영 추진

- 민간 자원 및 선도·교화 프로그램 활용, 과밀수용 해소

| 유명 스포츠선수·연예인과 위기청소년 결연 프로그램

■ 명예 보호관찰관제



소년 범죄 대응 체계화·전문화

|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 재범고위험군 전담직원제, 비행예방교육 기반 확충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소년법 개정 논의 지원

|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회 신설 운영 추진

- 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수립, 부처간 협업 상황 점검

■ 소년범죄예방협의회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젠더폭력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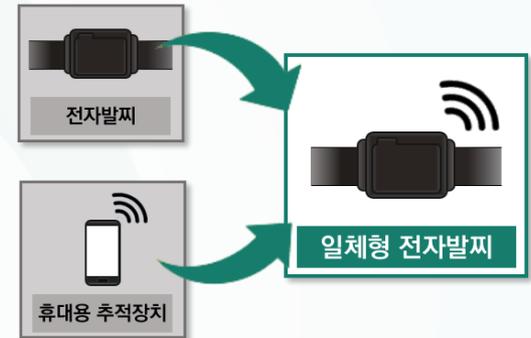
성폭력, 가정폭력 엄정 처벌

- 성폭력, 불법촬영·유포, 상습가정폭력 엄벌
- 일체형 전자발찌 운영 등 전자감독 강화

젠더폭력 대응 관련 법령 정비

- 스토킹처벌법 제정,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정착

- 신고의무자 법교육 프로그램 활용, 동영상 홍보 등

상향된 사건처리 기준 준수로 엄정 처벌

- 아동 사망시 고의여부 불문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구형

아동학대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

국민일보

2018년 1월 2일

檢, 여성·아동 상대 강력살인에 법정최고형 구형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案’ 시행

현재 처벌론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 판단

살인죄 구형량 전체적으로 올리고 사건별로 구형 기준 구체화시켜

검찰이 새해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범뢰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보인다. 성폭행이 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한다.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나타난 경우 사형 구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범죄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새 구형 기준에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역할 획기적 강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권정책 추진

- '18. 1. ~ 3.까지 총 18개 분야별 협의 실시

| 인권정책 주무부처로서의 기능 강화

- '18. 5. 기본계획 수립 후 이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절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

| 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내 이행절차 법제화

-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 UPR 등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역량 강화

-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상황 상시 점검



형사절차상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수사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인권 보호 강화

| 인권옹호기관으로 검찰 역할 재정립

-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축소, 수사과정 인권감독기능 강화

| 검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내부비리 점검

-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 활용,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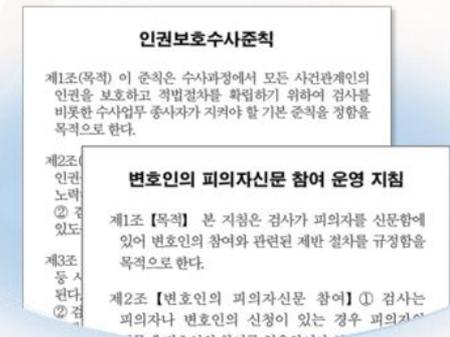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증진

| 출석·면담·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피조사자 배려

-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추진

|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 확대

- 변호인·피의자 조사중 메모 허용, 부당신문에 대한 이의제기 등
- 개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17. 12.) 철저 준수



형사절차상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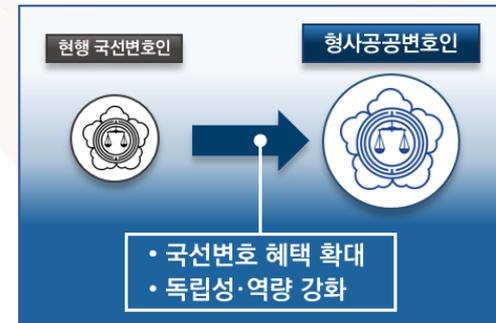
| 기존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개편

- 형사절차에서의 공공변호서비스 강화

| 도입방안 마련('18년), 단계적 시행('19년)

- 유관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형집행절차에서의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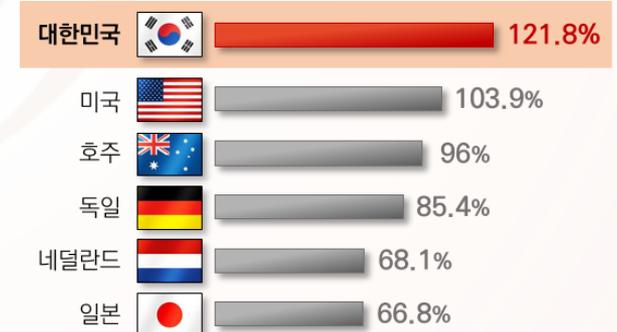
|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 대전교도소 등 4개 기관 신축 등 우선 추진

|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취업지원 및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강화

■ OECD 주요국가 교정시설 수용률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 범죄피해자 법률적 지원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17년)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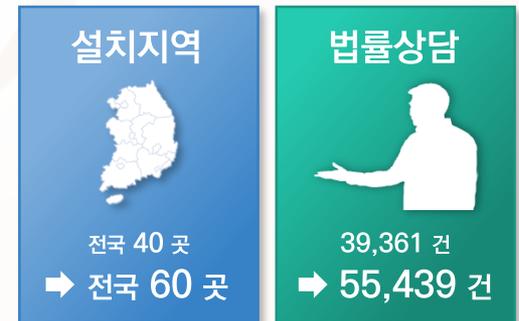
| 법률홍닥터 증원, 마을변호사 확대 배치

- 제도 홍보 및 전문화로 서비스 내실화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 지역 내 법률지원 인력과 '통합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 법률홍닥터 서비스 확대 ('17년)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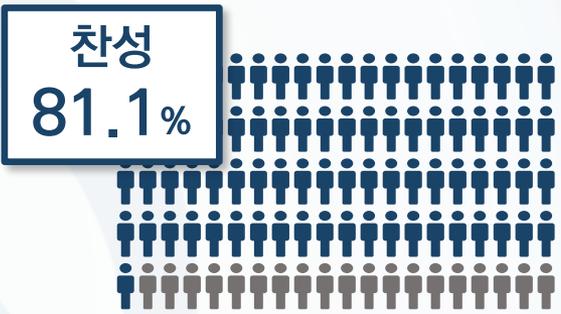
|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

- '17. 10. 법무부안 국회 제출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원

- '18. 1. 제1차, 제2차 회의 진행

■ 공수처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MBC, 2017. 12. 30.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지향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방안 마련
- 인권 옹호와 범죄 대응이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 각계 의견 충실히 수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

2018년 1월 14일

국회 사법특위 본궤도 ...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민중 공수처 드라이브에 한국당 반대, 국민의당 "독립성이 핵심"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필요성엔 공감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사법특위)가 법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끝낸 사법특위는 이번 주부터 사법개혁 방안도 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야당이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된 만큼 사법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 신설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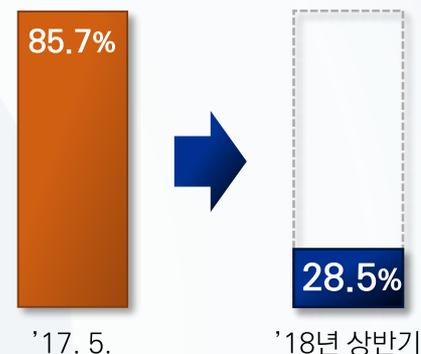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 '탈검찰화'

|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非검사 보임 ('17년)

|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 외부 개방 ('18. 1.)
- 종전 평검사 직위 10개 非검사 보임 ('18. 2.) 등 인재 영입 지속

■ 검사 보임 실·국·본부장 비율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거사 진상규명

| 진상규명 대상 과거사 사건 선정 및 진상 조사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17. 12.~)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 ('18. 1.~)

| 과거 종결사건의 직권 재심청구 여부 지속적 점검

■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 진행경과

위원회-법무부, 조사단-대검 설치협의
('17. 10.)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17. 12.)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18. 1.~)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7. 12.)
 - 중요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외부전문가가 점검
- |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추진
- |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8. 1.)
 - 기계적 상고 지양, 국민의 시각으로 결정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	학식·경험·덕망·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교수·변호사 등 형사사법분야 외부전문가 480명
기능	수사계속, 기소 여부 (불)기소 적법성 심사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 심사

자유롭게 소통하는 검찰문화 조성

- | 검찰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 검사 이의제기권 구체화 지침 시행 ('18. 1.)
 -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지침 시범실시 ('18. 1.), 시행 ('18. 4. 1.)
- | 수평적인 소통문화 정착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가 실현하겠습니다.

